

칼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코로나19와 국가자본주의 위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 세계 기업들의 부채는 13조5000억 달러다. 2019년에만 2조1000억 달러의 회사채가 신규로 발행되었다. 신기록인데 저금리에도 같은 해 초부터 시작된 팽창주의적 통화정책이 겹친 영향이다. 2022년까지 상환되어야 하는 회사채 규모는 4조4000억 달러다.

그러나 회사채 신용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2019년 발행된 회사채의 51%만이 BBB 등급 이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발행된 회사채 중 BBB 등급 이상 비중은 연평균 61%였다.

기업부채의 증가와 신용도 하락은 코로나19가 발생시킬 경제위기 아래서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엔 위기가 발생한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업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국유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다. 민영화는 당분간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도 각국 정부가 보유한 상장기업 지분율은 상당히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세계에 약 4만1000개의 상장기업이 있고 시가총액은 84조 달러다. 그중 1만개가 시총의 90%를 차지한다. 그 1만개 기업 지분이 소유하고 있고 14%를 각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상장기업의 2대 주주가 돼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주주인 경우와 국부펀드 및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탈리아는 국적항공사 알리탈리아에 25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재국유화에 돌입했다. 프랑스 정부도 위기상황에 처한 기업들의 국유화 옵션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KLM, 그리고 르노의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여론도 바뀌기 시작

했다. 콘도르항공이 첫번째 국유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UAE는 두바이 최대 상장기업 두바이포츠를 상장폐지하고 국유화하기로 했고 최근에 아랍코를 증시에 일부 공개한 사우디아라비아도 의료 부문에서 새 국영기업을 출범시켰다.

역사적으로 각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전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에 속한 민간기업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보호하거나 국영기업으로 유지해 왔다. 민영화는 경우에도 경영권 보호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했다. 금융과 통신이 가장 오래됐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도 일찌감치 우선적인 보호 대상에 편입됐다. 해운과 항만이 그 뒤를 따랐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기업도 보호 대상에 들어왔다.

향후에는 코로나 사태가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농업과 식품산업이 보호의 대상이 되거나 국유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 글로벌 외

교전까지 치열해진 상황이 때문에 사태 전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국의 직접적인 통제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모든 민간병원과 의료 관련 기업을 한시적으로 국영화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의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의 손길로 인도적 유대를 급속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유럽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고 여론의 호의를 얻게 된다면 영향력이 아프리카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신흥시장 지배구조 전문가 알리사 아미코에 따르면 이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중국의 경우 정부부문이 보유한 중국증시 상장기업 지분율은 평균 57%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민영화를 나름대로 활발히 추진해오다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이 저조해지고 민간기업들이 부실해지자 다시 자금지원을 늘렸다. 시장경제가 사실상 포기된 것처럼 보인다.

원래 '나랏돈'이라는 것은 없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나온 돈이거나 미래 세대의 생산력을 담보로 나라가 빚을 낸 것일 뿐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중국 모델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것은 인류역사의 위대한 실험이 될 것이다.

社 說

고용위기 해결이 급선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천66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5천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공포로 소비 감소와 매출 절벽의 악순환에 빠지고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서 대거 퇴출당한 결과다. 당장은 임시직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글로벌 수요가 격감하면 자동차·항공·정유·해운 등 핵심 기간산업에도 고용 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고용 충격은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관광·여행과 외식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 도·소매업(-16만8천명), 숙박·음식점업(-10만9천명)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개학이 늦춰지고 학원 영업이 제한을 받으면서 교육서비스업(-10만명)의 고용도 격감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중국 모델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것은 인류역사의 위대한 실험이 될 것이다.

로 고용 위기가 깊어진 것이다. 취업자에 들어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도 161만7천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끌여가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일자리 만들기 재정투입으로 살아나던 고용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51만6천명을 시작으로 3개월째 50만명 안팎 늘어난 취업자가 3월에는 늘기는 커녕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고용시장 한파가 본격화할 4월에는 감소 폭이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재의 고용 악화는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 초입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구조적 문제로 뿌리내릴 수 있다. 철저한 내부 방역과 국제공조로 코로나19 사태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고용지표는 민생 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으로 경각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정 어두운 탈북민 사기피해 장밋빛 인생에 먹구름

자유를 찾아 동토의 땅 북한을 떠나 꿈에 그리던 한국에 정착해 새로운 희망찬 삶을 시작한 탈북민들 사이에 사기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우리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탈북민들은 우리사회 정착기간이 짧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경제관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하지만 탈북민이라 불리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냉대적 시각으로 인해 어디에 하소연조차 하지못해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이들은 막상 생계를 꾸려야하는데 일자리는 없고 사회적응이 아직 덜된 탓에 각종 금융범죄자들의 현혹에 넘어가 자칫 범죄 타깃이 되기 십상이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현실은 상당수 북한이탈

주민들은 낯설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먹고 사는 것이 우선되면서 한국 생활이 모두가 꿈꿔왔던 장밋빛 인생은 아닐 것이다.

물론 반면에 국내 입국후 피나는 노력으로 국내정착에 성공하여 변호사, 의사,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도 많다.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체

제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피해다. 의외로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한다. 한순간에 전재산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삶의 원동력은 서서히 없어지고 낙담적인 생활을 영위할 위험성이 커진다.

북한이탈주민 또한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 선부른 금전적 거래는 주의하고 먼저 주변 지인이나 신변보호관과 상담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덕형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